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24.1.15.)
- ②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24.1.16.)
- ③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24.1.24.)
- ④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접수('24.1.29.)
- 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24.1.3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로 인한 환수액의 30% 이내 지급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 「금융소비자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위반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24. 1. 15. 국민권익위)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하는 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공직사회, 전년대보다 청렴해졌다”

- 다만, ‘건설·주택·토지’는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인식

(‘24. 1. 16. 국민권익위)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공직사회 ‘부패하다’ 응답비율 비교 〉

(단위 :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38.3	38.3	31.6	10.3	2.4
2022년	38.6	29.6	33.7	11.8	3.3
차이 (2023년-2022년)	▼0.3	▲8.7	▼2.1	▼1.5	▼0.9

11개 행정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한 행정분야로 응답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2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법무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1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56.5%)이 가장 높고,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응답 비율 비교 〉

(단위 :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56.5	38.7	42.9	12.3	7.9
2022년	54.4	36.0	39.0	13.5	8.0
차이 (2023년-2022년)	▲2.1	▲2.7	▲3.9	▼1.2	▼0.1

11개 사회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분야, 외국인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사회분야로 평가했다.

〈 최근 3년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2022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2021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사 설계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주한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자 등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700명	630명	400명	1,400명
조사방법	유·무선 랜덤 전화조사(RDD)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면접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전화조사
신뢰수준 (95%)	±2.62%p	±3.70%p	±3.90%p	±4.90%p	±2.62%p
조사기간	(상반기) 6월 1일 ~6월 8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17일	(상반기) 6월 7일 ~6월 22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27일	(상반기) 6월 1일 ~6월 23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27일	(상반기) 6월 5일 ~6월 30일 (하반기) 10월 11일 ~11월 2일	(상반기) 6월 7일 ~6월 14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20일

□ 조사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사회전반 부패수준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 부패수준 부정적 평가 이유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평가 - 부패발생 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부패경험	-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공정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 사회 불공정 분야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성과 체감도	- 현 정권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부패 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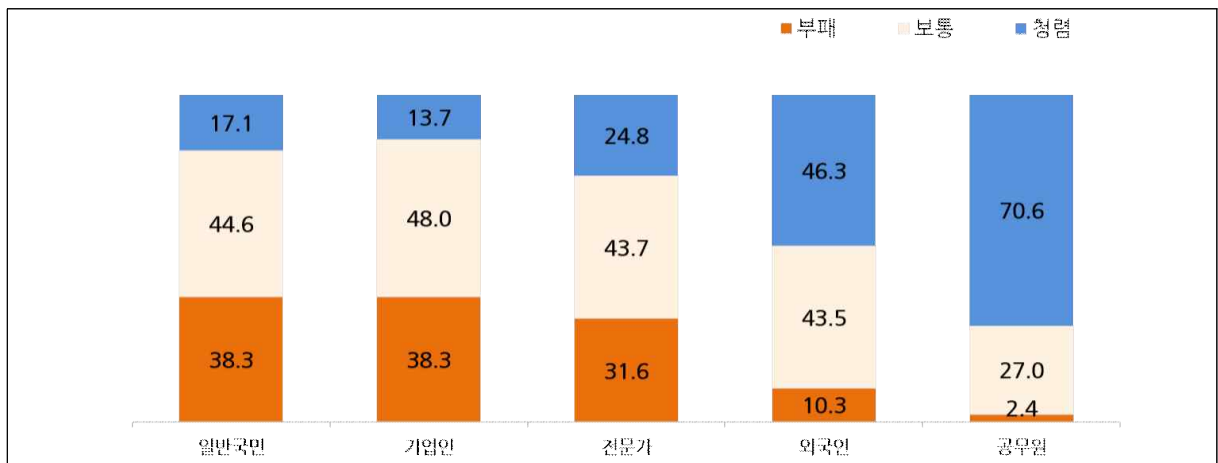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2.4%인 반면, 일반국민은 38.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일반국민(38.3%), 기업인(38.3%),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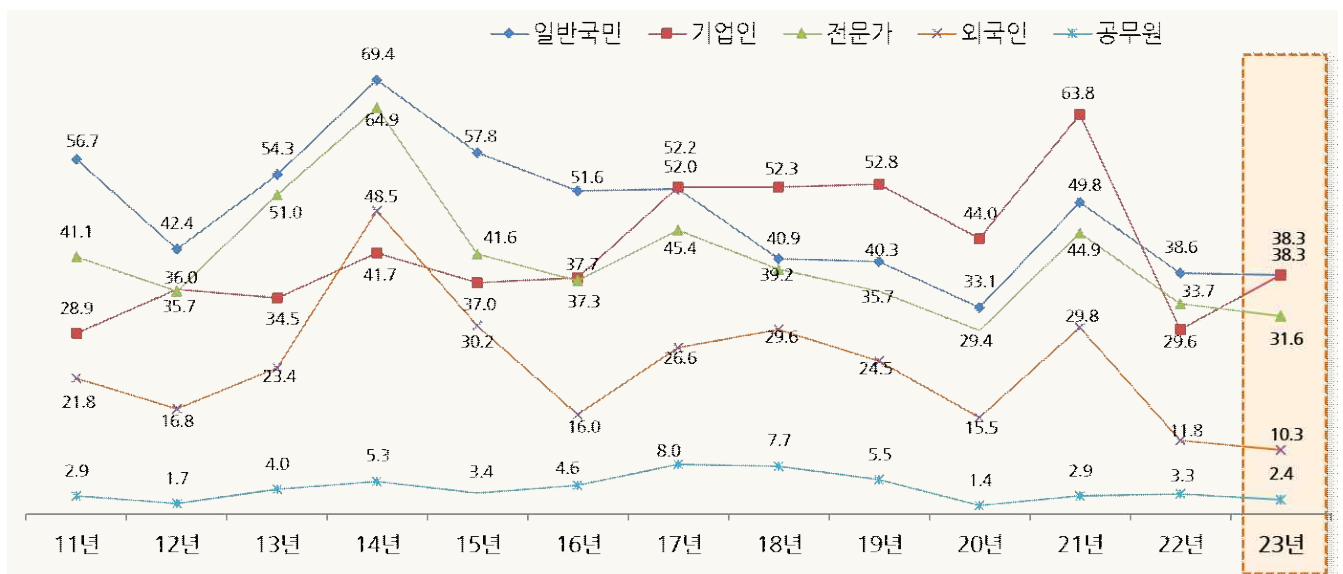


-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2.1%p), 외국인(-1.5%p), 공무원(-0.9%p), 일반국민(-0.3%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대보다 감소했음

【 공직 사회 ‘부패하다’인식 추이 】

(단위: %)



□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모든 조사대상에서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하고,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 최근 3년 간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2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법무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1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 행정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구분	건설, 주택, 토지	검찰, 출입국 관리 등 법무	병무, 국방	경찰	조달	교육	세무	환경	보건, 의료	식품, 위생	소방
일반국민	56.8	51.1	36.4	32.4	24.0	24.0	23.1	16.8	16.1	13.9	8.1
기업인	56.0	45.3	38.9	35.1	24.1	22.4	23.1	14.1	17.7	14.7	8.0
전문가	64.8	44.0	38.6	36.5	35.7	24.4	27.5	21.7	16.2	19.2	5.4
공무원	25.2	23.6	15.3	9.5	5.2	5.3	4.8	3.1	3.6	2.3	1.4

【 행정분야별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구분	건설, 주택, 토지	검찰, 출입국 관리 등 법무	병무, 국방	경찰	조달	교육	세무	환경	보건, 의료	식품, 위생	소방
일반국민	3.19	3.47	4.42	4.54	4.78	4.90	5.05	5.18	5.46	5.47	6.50
기업인	3.36	3.79	4.10	4.28	4.59	4.80	4.66	5.08	5.04	5.08	5.89
전문가	3.02	3.97	4.39	4.45	4.35	5.10	4.90	5.09	5.45	5.17	6.65
공무원	5.12	5.32	5.77	6.19	6.44	6.64	6.57	6.47	6.67	6.64	7.36

※ 부패인식지수 :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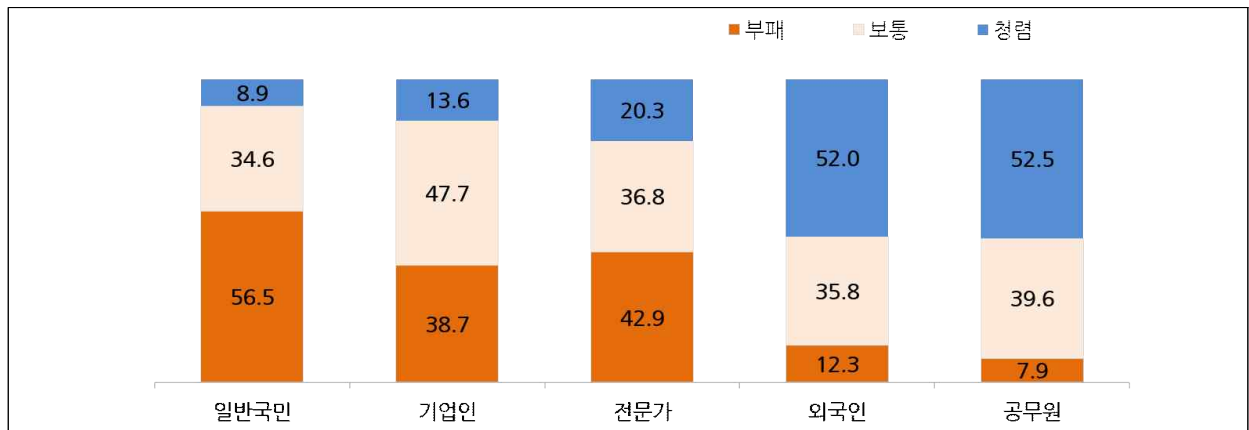
□ 우리 사회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56.5%인 반면, 공무원은 7.9%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56.5%),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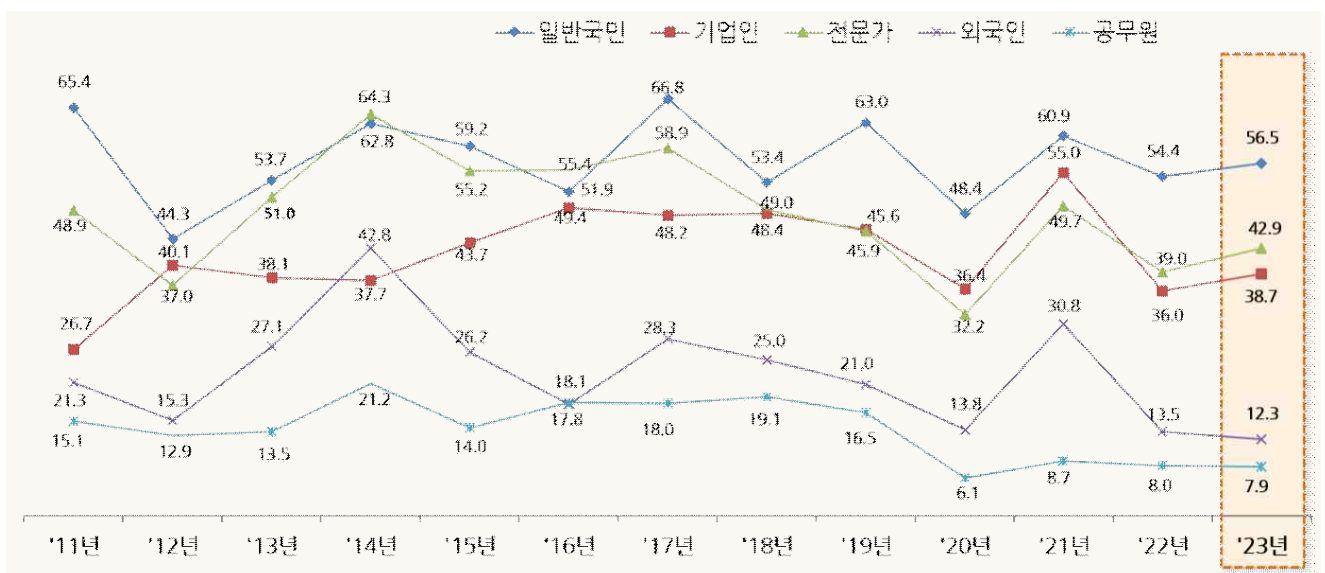


- 전년대비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3.9%p), 기업인(+2.7%p), 일반국민(+2.1%p) 유형순으로 상승했고, 외국인(-1.2%p), 공무원(-0.1%p) 유형에서 감소함

【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

(단위: %)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는 ‘정당, 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했고,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각각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외국인은 ‘교육’ 분야를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했고,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

【 최근 3년 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2022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2021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 사회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구분	정당, 입법	사법	언론	노조, 노동단체	종교단체	행정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민간기업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일반국민	69.8	61.5	59.0	52.3	48.8	44.4	43.5	42.2	32.0	31.6	28.0
기업인	62.3	50.7	53.4	42.3	45.7	39.3	37.3	30.7	30.3	37.1	22.3
전문가	76.5	57.3	58.4	52.7	53.7	37.8	44.3	41.4	31.7	45.2	26.2
외국인	18.8	15.3	14.8	9.5	21.8	12.0	8.3	7.8	14.3	8.0	9.5
공무원	26.1	22.4	32.7	21.6	29.4	5.6	13.6	22.3	16.4	18.9	10.8

【 사회분야별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구분	정당, 입법	사법	언론	노조, 노동단체	종교단체	공기업	시민단체	행정기관	문화, 예술, 체육	민간기업	교육
일반국민	2.45	2.90	3.10	3.37	3.58	3.82	3.89	3.91	4.44	4.46	4.61
기업인	3.01	3.58	3.51	3.82	3.76	4.23	4.36	4.19	4.23	4.46	4.80
전문가	2.53	3.51	3.29	3.52	3.60	4.04	4.21	4.43	4.07	4.56	5.11
외국인	5.99	6.28	6.28	6.40	5.88	6.48	6.51	6.41	6.55	6.24	6.57
공무원	5.10	5.33	4.60	5.09	4.81	5.79	5.11	6.63	5.35	5.32	5.98

※ 부패인식지수 :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28개 감독기관 협업 조사 추진
-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응시자 채용비용 전가 등 점검

(‘24. 1. 24. 국민권익위)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 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채용비리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조사기간** : 2024. 2. 1 ~ 10. 31
- **대상기관** : 총 1,386개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 **조사내용** : '23년 신규채용시 법령·상위 지침상 규정된 공정채용절차* 준수 여부

*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응시자 채용비용 전가, 인사위원회의 채용계획 심의, 감독기관 사전 협의, 블라인드 채용,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기준 명시 등

- **조사방식** : 감독기관 조사와 위원회 조사 병행
 - (감독기관 조사) 감독기관(중앙부처·지자체)별 소관 공직유관단체
 - (권익위 조사) 감독기관 부재 등 기관(23), 채용비리 의혹 발생 기관

< 국민권익위 조사 대상 기관 >

감독기관의 인사감사권한 불명확(19)			감독기관 부재(4)
전국재해구호협회	IBK신용정보	인천글로벌시티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주)인천메트로서비스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	인천종합에너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회복지법인 삼다	
한국거래소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한국증권금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접수

- 청렴윤리경영 이해와 실천방안, 부패리스크 분석 및 처방 등 프로그램 구성

(‘24. 1. 2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을 접수한다.

청렴연수원은 2022년부터 민간부문에 청렴윤리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소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유사 업종별(건설·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합동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실무 중심의 사례학습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민간기업 대상 방문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청렴윤리경영 이해와 실천방안, 기업 유형별·분야별 부패리스크 분석 및 처방 등 이론형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결합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청양식 등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영환경 특성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기존 고위직 교육을 최고관리자(기관장·이사·감사)와 관리자(본부장·실·처장 등)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고위직 등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권역별 관리자 맞춤형 합동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 효과성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청렴윤리경영 교육 외에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환경경영, 인권·안전경영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해 ESG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적 교육을 실시한다.

※ 원내 집합교육 14회(최고관리자 2회, 관리자 4회, 담당자 8회), 방문교육 18회(기관별 방문교육 15회, 권역별 관리자 합동교육 3회)

〈공직유관단체 청렴윤리경영 원내교육 일정〉

과정명(교육대상)	교육일자							
최고관리자 (기관장, 이사, 감사)	4.4 〈1기〉				7.4 〈2기〉			
관리자 (상임임원이 아닌 본부장·실·처장 등)	4.1~2 〈1기〉		6.11~12 〈2기〉		7.29~30 〈3기〉		9.2~3 〈4기〉	
담당자 (윤리·준법경영, 감사·청렴 담당자)	3.19~21 〈1기〉	4.23~25 〈2기〉	5.21~23 〈3기〉	6.18~20 〈4기〉	7.23~25 〈5기〉	9.24~26 〈6기〉	10.15~17 〈7기〉	11.5~7 〈8기〉

이 밖에도 청렴연수원은 청렴윤리경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작한 3분 내외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영상물 10편을 교육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물은 ▲청렴윤리경영 등장배경 및 CP제도 등 기본 개념(3편) ▲청렴윤리경영 우수·위반 사례(3편)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다룬 토론학습 영상(4편) 등 총 10편으로 구성된다.

영상은 국민권익위의 공식 유튜브 채널「권익비전」과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앞으로도 청렴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청렴수준 향상과 ESG 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 국제투명성기구(TI), 30일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발표
- 올해 민생 침해 부패 근절,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등에 주력

(‘24. 1. 30.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 (‘19) 59점 → (‘20) 61점 → (‘21) 62점 → (‘22) 63점 → (‘23) 63점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The rank is not as important as the score in terms of indicating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at country

이번 평가 결과는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D)’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社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 로 분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청렴지수(IPD)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출직 · 고위직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 · 공익신고자의 보호 · 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 · 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CPI 개요 〉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국가청렴도 개념**(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95년부터 발표)
 -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 국가별 적용되는 세부 지표가 상이하며, **한국은 9개 기관의 10개 지표 활용**
 - **기업인 설문**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2023년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에서 32위 기록
- 전년대비 점수는 동일(63점→63점), 순위는 1단계 하락(31위→32위)
 - ※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전년대비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위치함에 따라 국가순위가 1단계 하락
 -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22년과 동일(OECD 평균 66.1점)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2~'23년)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점수		56	55	55	54	53	54	57	59	61	62	63	63
순 위	전체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32/180	31/180	32/180
	OECD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22/38	22/38	22/38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국가는 OECD 회원국 38개국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1	Denmark	90	47	Poland	54
2	Finland	87	47	Slovakia	54
3	New Zealand	85	48	Cyprus	53
4	Norway	84	48	Georgia	53
5	Singapore	83	48	Grenada	53
6	Sweden	82	48	Rwanda	53
6	Switzerland	82	53	Fiji	52
8	Netherlands	79	53	Saudi Arabia	52
9	Germany	78	55	Malta	51
9	Luxembourg	78	55	Mauritius	51
11	Ireland	77	57	Croatia	50
12	Canada	76	57	Malaysia	50
12	Estonia	76	59	Greece	49
14	Australia	75	59	Namibia	49
14	Hong Kong	75	61	Vanuata	48
16	Belgium	73	62	Armenia	47
16	Japan	73	63	Jordan	46
16	Uruguay	73	63	Kuwait	46
19	Iceland	72	63	Montenegro	46
20	Austria	71	63	Romania	46
20	France	71	67	Bulgaria	45
20	„Seychelles	71	67	Sao Tome and Principe	45
20	United Kingdom	71	69	Jamaica	44
24	Barbados	69	70	Benin	43
24	United States	69	70	Ghana	43
26	Bhutan	68	70	Oman	43
27	United Arab Emirates	68	70	Senegal	43
28	Taiwan	67	70	Solomon Islands	43
29	Chile	66	70	Timor-Leste	43
30	Bahamas	64	76	Bahrain	42
30	Cabo Verde	64	76	China	42
32	Korea, South	63	76	Cuba	42
33	Israel	62	76	Hungary	42
34	Lithuania	61	76	Moldova	42
34	Portugal	61	76	North Macedonia	42
36	Latvia	60	76	Trinidad and Tobago	42
36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0	83	Burkin Faso	41
36	Spain	60	84	Kosova	41
39	Botswana	59	84	South Africa	41
40	Qatar	58	84	Vietnam	41
41	Czechia	57	87	Colombia	40
42	Dominica	56	87	Cote d'Ivoire	40
42	Italy	56	87	Guyana	40
42	Slovenia	56	87	Suriname	40
45	Costa Rica	55	87	Tanzania	40
45	Saint Lucia	55	87	Tunisia	40

93	India	39	136	Laos	28
93	Kazakhstan	39	136	Mali	28
93	Lesotho	39	136	Paraguay	28
93	Maldives	39	140	Cameroon	27
97	Morocco	38	141	Guinea	26
98	Argentina	37	141	Kyrgyzstan	26
98	Albania	37	141	Russia	26
98	Belarus	37	141	Uganda	26
98	Ethiopia	37	145	Liberia	25
98	Gambia	37	145	Madagascar	25
98	Zambia	37	145	Mozambique	25
104	Algeria	36	145	Nigeria	25
104	Brazil	36	149	Bangladesh	24
104	Serbia	36	149	Central African Republic	24
104	Ukraine	36	149	Iran	24
108	Bosnia and Herzegovina	35	149	Lebanon	24
108	Dominican Republic	35	149	Zimbabwe	24
108	Egypt	35	154	Azerbaijan	23
108	Nepal	35	154	Guatemala	23
108	Panama	35	154	Honduras	23
108	Sierra Leone	35	154	Iraq	23
108	Thailand	35	158	Cambodia	22
115	Ecuador	34	158	Congo	22
115	Indonesia	34	158	Guinea-Bissau	22
115	Malawi	34	161	Eritrea	21
115	Philippines	34	162	Afghanistan	20
115	Sri Lanka	34	162	Burundi	20
115	Turkey	34	162	Chad	20
121	Angola	33	162	Comoros	20
121	Mongolia	33	16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
121	Peru	33	162	Myanmar	20
121	Uzbekistan	33	162	Sudan	20
125	Niger	32	162	Tajikistan	20
126	El Salvador	31	170	Libya	18
126	Kenya	31	170	Turkmenistan	18
126	Mexico	31	172	Equatorial Guinea	17
126	Togo	31	172	Haiti	17
130	Djibouti	30	172	Korea, North	17
130	Eswatini	30	172	Nicaragua	17
130	Mauritania	30	176	Yemen	16
133	Bolivia	29	177	South Sudan	13
133	Pakistan	29	177	Syria	13
133	Papua New Guinea	29	179	Venezuela	13
136	Gabon	28	180	Somalia	11